

# 2002년 병원계 과연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글 · 박명인  
의계신문 국장

2001년 병원계는 2년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달린 한해로 회고된다.

한마디로 의약분업 실시로 개원가로서는 의보수가의 인상으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40%의 월 소득증가로 이어졌으나 병원계로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곧바로 경영난으로 연결됐다.

지난해 병원계는 2000년 의약분업 실시이후 개원가의 수입증대로 병원봉직의들이 대거 개원가로 흡수됨으로써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됐고 이는 자연히 봉직의들의 임금인상을 초래했다.

특히 개원가와와는 달리 병원들로서는 외래진료수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환자들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대학병원들 역시 의약분업 실시로

원내약국이 폐쇄됨으로써 평균 10% 내외의 외래환자감소를 초래했다.

그러면 과연 2002년 병원계는 2001년과 비교할 때 경영난을 돌파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병원 주변환경 부정적 의견 지배적

지난해 12월20일 병협 羅錫燦회장은 병협 송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이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의사, 약사 등 병원 전문인력의 구인난을 초래, 이는 곧바로 진료공백으로 이어졌고 병원은 환자감소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었던 한 해라고 회고하고 그러나 병원

계로서는 지난 한해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병원외래환자에 대한 원내 조제료를 인정하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개인병원 양도소득세와 법인병원에 부과되던 특별부가세 감면, DRG 포괄수가제와 의약품 대금 직불제 전면시행을 유보하도록 했다며 나름대로의 성과를 자평했다.

羅회장은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2년은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이 30%의 수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수가를 동결하려 하고 있으며 입원료와 조제료등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병원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었다.

羅회장은 그러면서 올해는 주5일 근무제와 모성보호관계법 등의 실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병원 경영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며 앞으로 병원 외래 조제실 폐쇄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에서 羅회장의 인사말은 한마디로 올해 병원계가 안고있는 또 풀어 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 병원경영난 계속될 듯

2002년 병원계의 숙제는 크게 보험분야와 행정 분야, 병원과 전공의들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수련 분야로 나뉘 돌파구를 뚫어야 할 것 같다.

먼저 병원경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보험분야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분야는 정부가 의약분업이후 고갈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돌리려는 노

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시시각각으로 쏟아낼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문제라든지 지난해 보류된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문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상대가치 관련 적정수가문제, 건강보험 약가제도, 펙스, EDI 청구문제 등 산적한 사항에다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계속 시비대상으로 남아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진료비문제 등도 여전히 수면위에서 병원계와 정부가 논쟁을 벌여야 할 숙제로 새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 각종 규제일변도 정책 쏟아져

병원계로서는 보험분야와 함께 행정분야 역시 병원경영을 움직이는 한 축인 만큼 올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의료관련 분야로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이다. 즉 지난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협 신상진회장은 단식투쟁을 해 가며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했지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입법은 의협으로서는 개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병협으로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한 해를 마무리 했다는 자평을 할 만 했다.

즉 그동안 병원경영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지만 종합병원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진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진료과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3백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이들 가운데 3개 진료과만 두면 되도록 변경됐으며 치과와 정신과 역시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진료과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 비전속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병원과 의원과의 어텐딩시스템과 개방병원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역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협이 서비스평가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한마디로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안은 병협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했을 정도로 국회가 병원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시작과 함께 병원계로서는 오랜만에 희소식을 접할 수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 병원계의 경영난을 극복 할 수 있다고 믿는 병원인은 없을 정도로 병원계로서는 어두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지금까지 병원계가 꾸준히 건의해 온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손금인정여부와 개인병원 양도소득세, 의료기기 관세 감면혜택 등 병원세제문제에도 대대적인 정책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이후 병원계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인 의약품 실거래가 개선과 전문의와 약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극심한 인력난, 선택진료 개선, 병원의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을 검토중인 개방병원제도, 중소병원

지원육성법 등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 의료법 병원계 주장 일부 반영

병원계로서 또 의협등 의사단체나 학계의 주장과 항상 상충되는 분야가 전문인력 배출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병원들로서는 의약분업 이후 상당수효의 전문인력이 개원가로 흡수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이 더욱 부족한 실정이 올해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의사 인력난은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상당수의 병원들이 의사가 없어서 병원 문을 닫거나 의원으로 종별을 변경해야 하는 사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양지병원장)가 조사한 의약분업 이후 전국 중소병원의 의사수효 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즉 당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1월1일부터 같은 해 10월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전국 144개 병원의 의사 정원 1,525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519명이 퇴직함으로써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같은 의사들의 이직현상은 서울등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갈수록 극심해져 전남 고흥의 한 종합병원 원장은 전체 의사 21명 가운데 자신과 친척 한명등 두명을 제외한 19명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직할병원과 한림대 의료원 산하 병원 등 그동안 전문의 인력난에서는 무풍지대라고 여겼던 상당수의 대학병원도 현재 최고 인기 진료과로 개원가에서 선풍적인 진료수입을 올리고 있는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진료과의 전문의가 속속 병원을 이탈함으로써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의가 없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으나 후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사 인력난은 이제 어느 한 두군데 병원들의 문제가 아닌 전국 병원들의 문제로 떠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같은 현실에서 병원들은 장기적으로는 묵시적으로 의과대학 증설을 요청하는 한편 전문의 배출을 늘려 병원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공중보건직사의 응급실 배치와 함께 정부가 나서서 전문의 취득시 반드시 병원에서 2~3년 근무 후에 개원을 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한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전문인력난 장, 단기적 해결을

결론적으로 2002년 병원계는 의약분업후에 생존하느냐 아니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냐하는 기로에 서 있는 한해로 기억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누적된 현안 가운데 일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해결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도 있으나 상당수효의 현안은 그대로 올해 병원계의 숙제로 남아있는 만큼 해법을 찾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현안이 항상 상대성이 있으며 그것도 다른 상대방이 아닌 의협이나 같은 병원계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수면아래에서 조금씩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기 때문에 병원계의 올해 앞길은 험난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지난해 의료법개정안에서 보여 주었듯이 병원계로서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up>2002</sup>